

재정경제부, 기술 있으면 '창업 OK'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한덕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증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한정된 자금을 기술력 있는 창업자 중심으로 배분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창업과 퇴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미국 실리콘밸리형으로 국내 중소·벤처 생태계의 체질을 바꿔가겠다는 목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대 중소·벤처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 신보는 기존 업무를 계속하되 기술신보는 창업·벤처기업 전담기관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신보는 100% 신기술 사업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도록 하는 내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명문화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세금이 보증의 재원이 되는 만큼 수혜자 부담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신보는 기존 보증료 요율을 현행 1%에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2%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기술신보도 기존보증료 요율을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일정시점이 되면 보증을 끊어버리는 ‘보증졸업제도’도 도입된다. 신보는 보증기간 10년 이상, 보증금액 15억원 이상의 경우 보증 만기도래 시점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보증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이 신보·기술신보에 내는 출연료도 차등화될 전망이다.

정통부,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앞장 선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소프트웨어 업계의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정보화사업 시 기술우위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성 최우선 평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참여지원제도 철저 시행과 분리발주 구매 확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정당한 대가 지급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액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업체 참여지원제도를 준수하고 소프트웨어를 운영·유지함에 있어 하자보수와 구별되는 유지보수에 대해 적정 대가를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인식과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정통부와 관련 기관은 각종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각 부처로 확대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연간 매출액 1000억 이상 벤처 22곳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코스닥시장본부와 무역협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 1000억 원 이상 벤처기업은 2003년 12개에서 크게 늘어난 22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매출액 상위 10대 벤처기업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2조 444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의 1조 4237억원에 비해 71.7%가 증가한 것이다. 이중 매출 1위는 4540억원을 기록한 레인콤으로, 전년도 매출액 2259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셋톱박스 수출업체인 휴맥스가 3874억원의 매출로 2위를 기록했고, 인탑스(2534억원), 에스에프에이(2410억원), NHN(2293억원), 엠케이전자(2022억원), 기륭전자(1711억원), 디엠에스(1708억원), 엠택비전(1680억원), 주성엔지니어링(166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벤처기업의 지난해 전체 수출실적은 2003년에 비해 32%가 증가했는데, 수출액 1위는 휴맥스가 2억 5200만 달러로 수위를 달렸다. 이어 레인콤이 1억 8900만 달러, 기륭전자 1억 3000만 달러, 오디엔케이와 케이비티모바일이 각각 1억 1900만 달러, 메디슨 1억 1500만 달러, 벨웨이브 1억 500만 달러였다.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중 2004년도 당기순이익은 NHN이 5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레인콤, 디엠에스가 2, 3위를 차지했다.

중기청, 벤처 지원 1조원대 '모태펀드' 만든다

중소기업청은 모태펀드(Fund of Fund)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투자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이 2000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출자해 설립한 창업투자 지원회사인 다산벤처는 사실상 폐지된다. '모태펀드'는 개별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1일 시행에 들어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조성되는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이며 정부재정에서 4000억원,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에서 6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중기청은 우선 '1차 모태펀드 출자 운용계획'을 확정해 재정에서 1000억원과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 구조조정조합에서 출자한 돈을 합쳐 총 3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재원을 이번 달까지 조성키로 했다.

공정위, 대기업·중기 간 불공정거래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합리적인 가격결정 모델을 도입하는 등 11개 과제와 25개 세부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우선 대기업이 응찰자 가운데 중소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후 개별협상을 통해 대금 가격을 깎는 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정품목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와 함께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는 배타적 전속거래도 실태조사를 벌여 엄단할 방침이다. 또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영상황과 계약내용 등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소자본 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규모 구매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위는 이밖에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된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기술자료 예치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벤처확인제 연장 법안 발의 추진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벤처확인제도 대체 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존 벤처확인제도를 향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공동 발의를 추진키로 해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재경위)에 따르면 재경위 소속 20여명 의원으로부터 벤처확인제 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 동의를 이끌어내 공동 발의계획을 추진 중이며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최인기, 엄호성, 이시중, 한화갑 의원 등 10여 명이다.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신벤처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 벤처확인제도 연장 요구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벤처기업협회와 벤처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벤처확인제 시행 이후 수년간 검증을 거쳐 안정화된 제도라는 점에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 측은 재경위의 동의를 이뤄지는 대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기업 수출비중 30% 돌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영탁)는 지난해 12월 결산 741개 코스닥 상장법인의 총 수출액은 17조 267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53조 9561억원)의 3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비중(28.68%)에 비해 3.3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소속부별로 벤처기업 340개사의 수출액은 5조 707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2.3% 급증해, 일반기업 401개사의 수출액(11조 5599억원) 증가율 29.62%를 크게 웃돌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IT정보기기 수출비중(70.88%)이 가장 높았으며 IT부품(67.88%), 통신장비(61.07%), 반도체

(53.41%) 등 IT하드웨어 업종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운송(70.51%), 오락·문화업종(52.89%)도 수출비중이 높았다. 한단정보통신 등 수출비중 상위 20개사의 수출비중은 97%를 넘었으며 특히 한단정보통신, 파라다이스, 에프와이디, 토필드 등 4개사는 100%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올해 벤처에 1500억 투자

국민연금은 올해 1500억원 한도 내에서 벤처투자를 집행키로 했다. 투자조합 출자액은 200억~300억원씩이며 총 6여 개 조합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벤처투자는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02년 1000억원, 2003년 2000억원 한도 내에서 벤처 투자를 집행했고, 현재까지 모두 2600억여 원이 창투자 투자조합에 출자됐다. 창업투자 업계는 국민연금의 벤처 투자가 중기청의 모태펀드, 한국IT펀드(KIF)와 더불어 벤처 및 창투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투자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라며 “정부 및 기관 투자 금액을 기반으로 투자조합을 만들 경우 올해 대략 7000억~8000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조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자금 중기·벤처에 유리하게 운용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김동철)은 생명공학 분야에 세계적인 스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10년 동안 2600억원을 지원하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운영 요령과 세부 수칙을 확정 발표했다. 세부 수칙에 따르면 평가원은 지원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일 때 가점을 주는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평가 항목에 넣었다.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자금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은 업체 선정 시 유리하게 됐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기관에 대해 부여하기로 했던 우대 배점이 없어졌다. 자유 응모와 무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국제 공동개발, 여성참여 연구원이 10% 이상이면 우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원대상에 합성의약품도 포함시켰다. 합성의약품이란 화학물질만을 이용해 개발한 신약을 말한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상 미생물이나 생체물질이 활용된 바이오제품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을 한정했었다.

지적재산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

주제 : 세계시장에서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전쟁 (부제 : 지적재산권 창과 방패)

취지	주제 및 강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진 기술을 확보한 회사들과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 후발 기업 간의 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에 의한 기업간 국제 분쟁의 증가로 인한 소송의 확대 ② 한국 회사가 자사의 미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제3국 회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 제기의 필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tent Portfolio 의 전략적 구축 : by Stephen Becker ■ 국제간 특허분쟁 및 미국법 상 337조 소송 : by Jack Lever ■ 반 독점법과 지적 재산권 : by Scott Megregian ■ 벤처회사의 지적 재산권 확보: by Kenneth Korea
행사 개요	신청 및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5년 5월 17일(화) 오후 2시 ~ 6시 ■ 장소 : 코엑스 국제컨퍼런스홀 ■ 주최 : 한국경제신문사 한경비즈니스 한국경제TV 한국무역협회 ■ 주관 : McDERMOTT WILL & EMERY LLP(MWE) ■ 후원 : 특허청 ■ 협찬 : 삼성전자(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 2005년 4월 18일(월) ~ 5월 6일(금) ■ 신청방법 : 지적재산권 국제심포지엄 사무국 전화 : 02-360-4841(4807) 팩스 : 02-360-4846 ■ 참가비 : 무료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